

광주 철거 현장에서 철골 무너져... 반복되는 학동 참사

60대 1명 응벽 깔려 부상 입어 전문가, 안전불감증 원인 꼽아 “점검 대상 아니다” 점검 0회 동구 “신고 대상도 관리 감독”

“4년 전 바로 옆인 학동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이웃 17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참사가 반복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4년 만에 또 다시 철거 중인 공사 현장에서 철골 가설물(가림막)이 무너졌다. 학동 참사 이후 생겨났던 재발방지책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 동부소방과 동구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께 광주 동구 지산동 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도로면 쪽 쌍줄비계(발판)이 무너지며 토사물과 잔재물이 인도를 덮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60대 현장근로자가 무너진 응벽에 깔려 허리에 부상을 입은 채 소방당국에 구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사고 현장은 마치 지난 2021년 6월9일 발생했던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현장을 연상케 했다. 약 20m 길이, 10m 높이로 세워져 있던 철근 울타리는 처참히 붕괴돼 인도를 넘어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인 차도까지 내려온 상태였다. 붕괴 충격으로 휘어진 철근 울타리와 무너진 응벽, 시멘트 자재들이 도로에 널브러졌고, 사고 현장 인근 도로는 차량 통제로 인해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수십 명의 공사 관계자



25일 광주 동구 지산동 건물 철거 가림막 붕괴로 인도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김양배 기자

들은 붕괴된 구조물을 정리하고 건축 자재를 옮기는 등 현장 수습에 분주했다. 심지어 100m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전문가들도 사고 원인을 두고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는 “비계와 옆 응벽이 무너진 해당 현장을 보면 잔재물의 압력에 의해 수평력이 작용됐고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애초부터 해체 방법을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진행, 잘못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물 철거·해체를 위해 지자체에 허가를 받을 때 심사를 받은 ‘잔재물 공간 확보’와 ‘폐기물 운반 계획’ 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 잔재물이 이상하리만큼 많이 보이고 쌓인 토사물과 잔재물이 비계쪽을 횡력으로 압박해 도로 쪽으로 넘어진 점이 학동참사와 비슷하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거리를 지나가던 도중 붕괴 현장을 지켜본 시민들과 인근 주민들도 공포에 떨어야 했다.

외출 후 귀가하던 구모(71)씨는 “늘 다니던 길이라 당연히 안전한 줄 알았는데, 불안한 길이 됐다”면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에 대해 충분히 검토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학동과 똑같은 일이 발생해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사고 현장 인근의 버스정류장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40대 김 모씨는 “평소에도

설치된 구조물이 메인이 아니라 보조장치인데도 지지대나 철근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또다시 제도를 보완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학동참사 이후에도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비롯해 건설 현장 재해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 쏟아진 재발방지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2월 학동참사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신설됐다. 지자체가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 건설 현장 안전을 감독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축공사장·해체 현장에 대한 수시·불시 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광주 동구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했지만 이날 철거 현장에는 한번도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체 철거 공사는 ‘해체 신고’ 대상이지 ‘관리 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동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3개층 이하 500㎡ 이상의 철거 공사 현장은 해체 계획서도 검토하고 계획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실시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철거 공사는 2개 층이기 때문에 적정성에 대한 검토만 하고 관리 감독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 대로변이나 주민 통행에 밀접한 현장의 경우 ‘해체 신고’ 대상도 현장에 가서 안전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정유철 기자

관급자재 납품 가격 담합한 도교육청 공무원 검찰 송치

관급자재 입찰 과정에서 전남도교육청 공무원이 특정 업체 낙찰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입찰방해·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도교육청 직원 A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월 전남지역 내 고등학교 2곳에 교실 천장 흡음재 납품을 위한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다른 생산 업체를 탈락시키고 부풀린 단가를 써낸 업체들을 선정해 4700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입찰에 응모한 업체들에게 가격을 높게 제시하라고 지시한 뒤 따르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시킨 것으

로 조사됐다. 특히 납품 단가를 저렴하게 부른 업체에게는 A씨가 입찰을 취소시키고 ‘생산 설비 부족’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2명은 흡음재를 생산할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여한 뒤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다른 업체와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를 입수하고 사건을 파헤친 경찰은 녹취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을 일부 확인, 검찰에 넘겼다. 이정은 수습기자

너클 끼고 목사·교인 폭행... 30대 외국인 구속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찾아가 목사와 교인 등을 폭행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30대 카자흐스탄 국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9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외국인 교회에서 너클을 끼고

러시아 국적 고려인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이간질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같은 일을 벌였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정상아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